

금융위·금감원도 지방으로?... “업무 효율성 등 검토해야”

내일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 공개
금융위·개인정보위 세종 이전 추진
금융 현장과 물리적 거리 떨어져
이전 시 이직·퇴사 고려 응답 70%

정부가 연내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두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신호탄으로 내년부터 수도권에 남은 350여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과 금융 기능의 지방 분산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와 자본시장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금융 정책·감독기관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문인력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구성원 1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방 이전 시 이직·퇴사



지난 1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위·금감원 지방이전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은 69.7%였다. ‘보통’ 응답까지 포함하면 85.6%가 이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께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전 대상은 350여개 기관으로, 2005년부터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153개)의 두 배를 웃돈다. 이에 따른 이주 수요도 약 1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금융위와 개인정보위의 세종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두 곳은 외교·통일·국방·법무·성평등가족부 등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을 제외하면 정부서울청사에 남은 사실상 마지막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이다.

문제는 금융위 이전 이후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정책과 감독, 위기 대응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이전 절차도 복잡하다. 금감원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은 설립 근거법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역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이전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관계 역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권 내부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국책은행 노조들이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 데 이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노조도 2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금융권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정책·감독기관과 금융 현장 간 물리적 거리가 멀어진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주요 금융회사는 물론 자본시장 핵심 기능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금융당국과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검사·감독과 정책 협의 과정에서 이동 시간과 비

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회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검사 업무가 많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총 707회의 검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검사에 투입되는 인원만 2만8229명에 달한다.

전문인력 이탈 가능성도 부담이다. 금융 공공기관은 금융시장과 회계·법률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지방 이전 과정에서 인력 유출이 발생할 경우 조직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약화할 수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법률·회계 인력 시장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신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은 위기 상황에서 정책당국과 감독기관, 금융회사 간 즉각적인 공조가 필요한 산업”이라며 “물리적 분산이 금융시장 대응 속도와 감독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허정윤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삼성·SK 반등에 빛투 ‘9조9503억’ 쌓였다

하루 만에 합산 잔액 5311억 늘어
증권가, HBM 실적 성장엔 ‘등의’
범용메모리 수요 둔화 두고 이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하자 빛투(빛내서 투자)도 덩달아 늘고 있다. 주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잔고가 빠르게 복원되면서 추가 하락 시 반대매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코스콤 CHECK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신용용

자 잔액은 지난 21일 9조9503억원으로, 하루 만에 5311억원 늘었다. 이날 신규 신용용자도 총 2조4943억원 발생했다.

합산 잔액은 이날 4일 8조3769억원에서 1조5735억원(18.8%)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저점 대비 20.2% 오른 5조1059억원, SK하이닉스는 21.7% 증가한 4조8444억원을 기록했다.

◆HBM 성장에는 공감...범용메모리 전망은 온도 차

증권가는 HBM이 두 회사의 실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지만,

범용메모리 수요 둔화와 공급 증가가 미칠 영향을 놓고는 시각이 갈린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삼성전자 주가 하락이 영업환경의 변화보다 차익 실현과 수급 부담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이견 ‘매수’와 목표주가 37만원을 유지하고 현 주가를 비중 확대 구간으로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범용 D램의 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더라도 HBM 가격과 출하량 증가가 전체 평균판매가격 개선을 이끌 것

으로 전망했다.

반면 박유익 키움증권 연구원은 범용메모리 수요 둔화와 공급 증가를 반영해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39만원에서 35만원으로, SK하이닉스는 22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낮췄다.

높은 메모리 가격으로 스마트폰 업체들이 구매에 보수적으로 돌아섰고 노트북과 PC용 메모리 수요도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다는 이유다. 2027년 예정된 공급 증가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 등 중국 업체의 점유율 확대도 부담 요인으로 제시했다.

다만 키움증권 역시 두 종목의 투자의견은 ‘매수’로 유지했다.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 확대와 SK하이닉스의 HBM

실적 성장이 주가 반등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반도체로 이동한 신용용자...반대매매 위험도

이호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신용용자가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신용용자 종목의 주가가 담보유지비율 아래로 내려가면 반대매매가 발생하고, 해당 물량이 주가 하락을 가속해 다른 신용계좌의 반대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따뜻한 연결 1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평화를 부르는 따뜻한 말, 어머니 사랑의 언어 #내 번째

대한민국 대통령 단체표창·정부 포상·대통령 표창 수상
영국 여왕 자원봉사상 수상(영국 하나님의 교회)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 수상(금상 89회, 라이프타임상)

일부 시 생성 이미지 포함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응원할게”, “오늘도 애썼어”
주저앉고 싶은 순간, 다시 일어설 힘이 돼주던
어머니의 다정한 사랑의 말들.

더 많이 연결되었지만 더 외로운 시대,
따스한 말 한마디가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교회 국내외 400만 성도들은
가정과 이웃, 지역사회에 선한 변화를 일구며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들어갑니다.

‘평화를 부르는 어머니 사랑의 언어’는?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 60주년을 맞아 2024년부터 시작한 소통과 화합 캠페인으로 현재까지 134개국에서 연인원 약 546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어머니 사랑이 담긴 9가지 언어로, 가정·이웃·학교·직장 등 일상의 변화에서 시작해 평화로운 세상을 조성해 갑니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